전북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 올해 주요업무계획

“도정발전 위한 대내외 소통·협치 실현”

4개 전략 · 18개 과제 역점 추진

도-국회-도의회-중앙부처 정책 全 과정 소통 강화

출향도민과 함께하는 고향 사랑으로 지역발전 유도

지역의 미래 여는 외국인정책, 지역 성장동력 창출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이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국장 백경태)은 지난 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2025년 새해를 맞아 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통해 정책 소통 및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치권과 출향도민, 자원봉사자, 외국인 등 도정 동반자들과 대내·외 소통과 협치 전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정책소통을 활성화해 도민과의 신뢰 구축에 나설 방침이며,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데 주력하기 위해 ‘소통과 협치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을 목표로 4개 전략, 18개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한 대내외 소통과 협치 실현을 목표로 두고 정치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도정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치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전북발전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중앙·지역 및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를 통해 탄탄한 팀워크를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정책간담회 수시 개최와 정당 및 보좌관 간 소통을 강화하여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산 편성 순기를 고려해 단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도-도의회 간 소통 다변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간담회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全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민·관 협력과 자원봉사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지 출향도민(350만명)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전북도민회(37개소), 호남향우회총연합회(12개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도정 동반자 관계를 돈독히 할 계획이다.

그리고, 재경 전북도민회의 새로운 체제 출범에 따라 가칭전북도민회중앙연합회 구성 추진 등 협의를 통해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SNS를 활용해 출향도민들에게 도정정책을 공유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출향도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며, 2023~2024년 출향단체 소속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를 36명 발굴하여 8,600만원을 기부받았는데, 올해는 금액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 만큼 더 많은 출향도민으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표축제와 연계한 고향방문 지원(3,000여명)도 활발히 추진하여 도정 발전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대외국제소통국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이 93억 2천만원이고, 기부건수는 7만3,000건으로 전국 3위를 달성했다고 했다.

이중 많이 기부한 순서는 정읍(10억 8,000만원), 임실(10억4,000만원), 부안(7억6,000만원) 순으로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으며, 답례품은 쌀, 치즈, 한우, 돼지고기, 사과 등 각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선호되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답례품 금액도 2,000만원으로 상향되어 600만원 가격의 답례품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호 선호도가 높은 품목으로 새로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쌀 소비 촉진’이라는 지역 현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한 ‘의米(미)있는 고향사랑기부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외국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新출입국 이민정책 혁신주도,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형별, 계층별 다변화된 출입국 이민 트랙을 마련하고 중앙에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통해 지역 수요 및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도약을 위한 국제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전북자치도 자매·우호지역(5개국 11개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여 교류분야 발굴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도모하고, 지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양적, 질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도 대외국제소통국은 수요자 중심 홍보로 전북 브랜드 가치 UP, 생활 속 도정 소통 확대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홍보 전략을 통한 도정 브랜드 가치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세종 지역 도정 가교 역할의 확대를 기하겠다고도 했다.

중앙협력본부는 향우단체, 국회와 정당, 중앙부처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도정참여 및 범도민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수도권 도정 홍보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앙협력본부 회의실 및 업무공간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정책발굴을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2036하계올림픽 유치 등 도정 현안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백경태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중요한 해로 도정 소통 채널의 다변화에 노력하겠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 변화를 이끄는 한편, 지금까지 잘 추진해 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기반 이민정책 선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등을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검찰, 인도 방문 관련 김정숙 여사 ‘무혐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과 ‘샤넬 재킷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전 영부인 김 여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영부인 단독으로 외유성 인도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착용한 샤넬 재킷을 개인 소장했다는 의혹 등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았다.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우리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타지마할 관람을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미리 정해진 공식일정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파트너였던 인도가 대통령 혹은 최고위급 사절단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대표단의 인도 방문이 추진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당시 정부는 대표단이 사용할 예산에 대해 기재부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충분히 따랐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샤넬재킷 미반환 의혹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18년 김 여사가 프랑스에 국빈으로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샤넬의 한 글 패턴 트위드 자켓을 개인 소장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그 과정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김 지사, 군산시의원과 고성 다툼에 유감 표명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 도지사 대신 전해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목소리 귀 기울일 것”

김영일 시의원 “지역발전 위한 일로 물의 일으켜 새만금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도와 긴밀히 협력”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7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의 유감 표명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철태 대변인은 지난 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오후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김관영 지사와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 간에 일어난 고성 등 소동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대변인은 “도지사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욱 성숙한 자세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모두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북발전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김 지사를 대신해 유감을 표명하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고 이번 유감 표명으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도지사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도 “이번 일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에서 일어난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만금특별대책위원장으로서 군산 신항만 문제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군산시의 입장이 잘 반영되도록 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사항이 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군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 시간에 새만금 신항 문제와 관련, 김관영 지사와 군산시의회 김영일 시의원 간에 고성 등 소동으로 더 이상 대화시간이 진행되지 못하는 등 파행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김부겸 전 총리 “민주 세력 모아 정권 재창출해야”

광주 · 전남 방문… “계엄 · 탄핵 갈등에 길 묻는 심정으로”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광주를 찾아 “정권 재창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총리는 “계엄·탄핵 갈등 국면에 길을 묻는 심정으로 광주에 왔다. 국민들이 최근의 불확실성 속에서 언제까지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한다”며 “(또)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 세계적인 경쟁 속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광주 방문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텃밭 민심 다지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있는 상황에 답변이 조심스럽다”며 “(다만) 국정 안정·서민 경제 준비 측면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에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여전히 51대 49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내란의 원죄 자체는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본다. 정권교체·탄핵심판 의견이 과반을 넘고 있고 그러한 국민 마음을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밝힌 ‘민주진영 안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에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힘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다. 민주성이 보장될 때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컸던 만큼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 당시 총리를 역임하며 겪은 부동산 정책 실패 쓴소리에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나 문 정부가 시도한 여러 개혁 또는 제도적 작업이 전부 의미 없었다고 폄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이 임장이다. 지난 촛불 시민혁명 결과가 민주당 정권으로 이어졌으나 (최근) 폭이 좁아져 더 큰 성취를 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기억한다”며 “민주당의 폭을 넓히면서 이번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들의 힘을 엮어 대한민국의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민주당 복당

“더 큰 민주당 가는 계기 되길”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와… 정권 교체 위해 헌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복당 소식에 “제 복당이 우리 당이 ‘더 큰 민주당’으로 가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본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복당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감회가 새롭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당적지였던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해 심사 절차를 밟았고, 이달 3일 복당이 허용됐다. 이를 두고 김 전 지사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저는 지난 1994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정치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늘 민주당과 함께해 왔다”며 “공직 임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제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거나 당을 떠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자동 탈당된 바 있고, 그로 인해 당에 부담을 줬던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제 정치적 고향,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눈이 소복이 내린 아침에 복당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린아이처럼 설레고 가슴이 뛴다”며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한 사람으로 남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핵을 통한 내란 세력 심판과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 자동 탈당 처리된 바 있다. /뉴시스

민주 고민정 의원, 비명계 비판 유시민 발언에 반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낸 비명계(비이재명계) 인사들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향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 모습은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국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대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그에 대해서 때로는 풍자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순서”라고 밝혔다.

고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유시민 작가가 지난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비명계 인사들을 향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유 작가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 인사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을 통합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가자 이들이 이 대표 비판에 앞서 계엄 사태 종식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